



도, 고령친화 일자리 선도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실현

내년도 전북 노인일자리 참여율 19.7%... 전국 1위 광역시 제외 도 단위 중 유일하게 도비 20%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격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으로 ‘고령친화 일자리 선도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 소득 보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동시에 실현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18일 도에 따르면 2026년 전북 노인일자리 배정 인원은 8만9,63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45만4,045명 대비 19.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며, 평균(9.3%)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실질적으로 노인 5명 중 1명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셈이다.

전북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꾸준히 확대됐다. 2023년 6만8,901명에서 2024년 7만8,473명, 2025년 8만6,71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의 고령화율은 26.3%로 전국 평균(20.9%)보다 높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며 ‘일하는 고령사회’ 모델을 구축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고령층 지원 정책으로, 공익활동(환경정비·안전지킴이 등), 역량활동(보육·돌봄·복지시설 지원 등), 공동체사업(소규모 매장·공방 운영), 취업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일정한 소득 제공은 물론 사회적 고립 예방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에도 기여하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돌

봄·안전·생활지원 등 사회적 기여형 일자리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매칭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도 단위 중 유일하게 도비 20%를 부담한다. 이는 전국 평균(15%)보다 5%p 높고, 충남·전남·경북·경남(15%), 강원(10%), 경기(7.5%), 충북(5%) 등 다른 도를 앞서는 수준이다. 2026년 총 예산은 4,242억원이며, 이중 순지방비는 2,121억원으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규모다. 인구 대비 재정 투입이 큰 만큼 사업 확산 효과도 뚜렷하다.

전북은 공익활동형뿐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유형을 고르게 확대하며 ‘전북형 일자리 모델’을 완성하고 있다. 2026년 유형별 참여 인원은 공익활동형 6만2,991명, 역량활동형 2만1,063명, 공동체사업단 4,014명, 취업지원형 1,565명이다.

특히 역량활동형 일자리는 2023년 8,262명에서 2026년 2만1,063명으로 4년간 2.5배 이상 급증했다. 베이비붐세대와 신노년층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 유형은 ‘단순노동 중심’에서 ‘사회적 기여와 자아실현의 장’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 변화로 꼽힌다.

도는 지난 6월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도내 전 시·군에 배포하고,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수칙

준수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현재 도내 모든 시·군에서는 시니어안전모니터링단 684명이 활동 중이다. 역량활동형 일자리의 일환인 모리터링단은 현장에서 참여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활동환경의 위험요소를 점검하며 노인일자리 안전망을 보강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행기관에 전담 안전관리인력 50명을 신규 배치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관리, 현장관리·지도, 사고 사후 관리 등을 전담하도록 해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더욱 안전한 노인일자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과 민·관 협력체계 강화, 안전관리와 현장 대응력 향상 등에도 나선다. 특히 내년 3월부터 본격화되는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해 돌봄 및 안전·생활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역량활동형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마을 환경정비, 아동·노인 돌봄 지원, 공공시설 보조, 지역 안전점검 등 생활 밀착형 일자리가 활발히 운영되며 참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은 도와 시군, 수행기관이 한마음으로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북이 고령친화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먹거리 새만금 현안 예산 증액해야”

민주 이원택 의원, “국감서 전북 홀대 상징 된 새만금 사업 문제점 파고들어... 미룰 수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국회 정부추출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먹거리 새만금 핵심 현안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부각시키고 정부차원의 예산편성을 집중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북 홀대’의 상징이 돼버린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새만금의 핵심 현안들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이 17일 SNS에 올린 내용의 그 첫 번째로 “10년째 계획만 반복 중인 ‘새만금 농생명용지’ 문제를 손에 꼽았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활용 계획조



차 제대로 세우지 못해 전북의 미래를 발목 잡고 있다”며 “13개 단지 계획의 조속한 실행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새만금에서 전주까지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는 2010년 착공 이후 15년 만에 개통된다. 두 번째 전북홀대의 상징으로 ‘배후부지 없는 반쪽짜리 새만금 신항’을 꼽으면서 ‘배후부지 예산의 국가재정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미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하면서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만금 수목원’ 사업으로 그는 새만금수목원 사업에서 전북 업체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이도 ‘전북 홀대’ 실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사업법의 지역업체 우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23건 중 단 1건만 전북 업체”라면서 “도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북 업체의 우선 계약”을 요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국가산단 매립 중단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수익성을 핑계로 국책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전북 RE100 산업벨트의 기반 완성을 위해 4·9공구 매립을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권희성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서둘러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 생활 밀착형 업종서 이용 가능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16일 기준으로 1·2차 소비쿠폰 총 지급액 5,129억원 중 약 4,919억원(95.9%)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가족, 동료 등 주위 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

은 카드사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잔액 조회가 가능하며, 신분카드의 경우는 카드 뒷면의 전화번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폭넓게 이용 가능하다. /이만호 기자

성평등·가족친화정책 ‘결실’ | 김관영 지사, 전국여성대회 ‘우수지자체장상’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시상식에서 김 지사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는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을 통

한 여성가족정책 추진 기반 강화가 꼽힌다. 분산돼 있던 여성정책연구소와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합해 정책 연구와 교육, 취업지원 기능을 하나로 통합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도 두드러진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공

무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휴무형 또는 재택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며 성평등한 육아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고창군의회가 만들어가겠습니다.

고창군의회